

종합

기아차 노조 파업 확대키로

매일 4~6시간... 광주공장 피해 3,100억 추산 “현대차와 동등한 대우 해 달라” 요구 여전

새해 벽두부터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는 기아자동차 노조가 오는 18일부터는 파업 수위를 점점 높여나가기로 했다. 기아차 노조는 15일 ‘쟁대위(쟁의대책위원회) 속보’를 통해 “회사 측에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파업 수위를 높여 나가겠다”며 “18~20일엔 4시간, 21~22일엔 6시간 파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 양재동 그룹 본사 앞에서 장외집회도 열 방침이다.

22일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쟁대위를 열어 전면 파업 등 파업 강도를 더 높일 계획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11~13일 광주공장을 비롯해 소하리, 화성공장 등에서 주·야간조 2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여 광주공장에서는 지난 11일 주·야 2시간씩 생산라인이 멈췄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이번 임금협상과 관련해 노조가 지난해 6월30일 처음 파업에 들어가 올해 1월11일까지 12일간 파업을 벌였고

20년 연속 파업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또 지난해 12월17일부터 특근을 거부한 데 이어 올해 1월8일부터는 잔업도 거부해 ‘쏘울’, ‘스포티지’ 등 생산에 적잖은 차질을 빚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이번 임금협상 사태와 관련 총 손실액 1만8천여대, 매출손실액 3천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쟁대위의 파업 확대 지침에 따라 광주공장에서는 오는 18~22일 5일동안 파업

이 전개되면, 매출 손실액은 4천여억원(손실대수 2만7천여대)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아차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3월 출시 예정인 스포티지 후속 ‘SL’ 양산과 ‘쏘울’ 증산에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기아차 노사는 15일 오전 임금교섭을 재개,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병행하며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임금협상은 회사 측이 ‘기본급 동결, 성과급 300%, 일시금 460만원 지급’을 제시했으나, 노조 측은 “현대차와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며 “기본급 동결, 성과급 300%, 일시금 500만원 + α”를 요구,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국민참여당 17일 출범 지역인사 이병완·이백만 참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주도하는 국민참여당이 17일 공식 출범한다. 참여당은 이날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당원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 창당 대회를 열어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구성하고 당헌·당규와 정강정책을 채택할 예정이다. 대표 경선에는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단독 입후보해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으며, 5명을 뽑는 최고위원 경선에는 천호선·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 6명이 출마했다. 참여당에 참여하는 이 지역 출신인사로는 창당위원장인 이병완(장성)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백만(진도) 전 청와대 홍보수석, 송병태 전 광주 광산구청장 등이 있다. 참여당은 내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3명을 확정할 뒤 6·2 지방선거 준비위원회 전환, 당원과 국민에 의한 상향식 공천으로 후보자를 선출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철언, 여교수에 손배 승소 법원 “160억 지급하라”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박경호 부장판사)는 15일 체육청소년부 장관을 지낸 박철언 씨가 모 대학 무용과 교수 강모(여)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씨는 박씨에게 16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1999년부터 강 씨에게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돈에 대해 은행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가 통장을 위·변조하거나 돈을 인출해 178억4천90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강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박씨가 같은 취지로 강씨를 고소한 뒤 178억원이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지만, 검찰이 돈의 성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강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으며 178억원에 대한 횡령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6월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연협뉴스

자동차로 8시간 달려 잔해더미속 아내 구출

■ 아이티 최악 지진 참사 현장

최악의 지진 참사로 아이티의 행정 기능이 마비되면서 아이티 전세가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하지만, 사망자가 10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서도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의 이야기도 간간히 전해져 감동을 주고 있다. <시신으로 쌓은 벽, 불만 고조>= 14일(이하 현지시간)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는 구조작업 지연에 불만을 품은 일부 시민이 항의의 뜻으로 시내 몇 곳에 사망자의 시신으로 벽을 쌓아 길을 막는 참혹한 풍경이 발견됐다. 미 CBS방송에 따르면 공지에 내몰린 시민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흥기를 들고 시내를 돌아다니며 약탈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아이티 대통령 모습 드러내>=행방이 묘연했던 르네 프레발 아이티 대통령은 지진 발생 사흘째인 14일 포르토프랭스 국제공항에 레오넬 페르난데스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프레발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이미 집단 매장지에 7

천명의 시신을 묻었다”고 말했다는 구호활동 계획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8시간 달려가 아내 구해낸 남성>=지난 12일 아이티의 한 시골 마을에 있었던 미국인 프랭크 소프는 지진 발생 소식을 듣자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아내 질리언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앞뒤 가리지 않고 자동차로 8시간을 달려 포르토프랭스에 도착한 소프는 건물 잔해 더미 속에서 힘겹게 움직이며 구조를 요청하는 질리언의 손을 봤다. 소프는 질리언과 대화를 나누며 손수 잔해를 파내고 그녀를 구해냈다. 질리언은 약간의 부상을 입긴 했지만 무사한 상태다. <이유학가 중단 공항 포화상태>=최악의 지진이 휩쓴 아이티 당국은 14일 미국을 비롯, 다른 국가들에 수도 포르토프랭스 국제공항을 비행기 이륙 허가를 내리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미국 관계당국이 밝혔다. 이에 따라 각국의 비행기편을 통한 신속한 구호 물품 지원 및 구호팀 수송 등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협뉴스



15일 광주 동구청에서 열린 '제21차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도심공동화 극복 대안을 마련 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은권(대전 중구), 윤순영(대구 중구), 정동일(서울 중구), 박승숙(인천 중구), 유태명(광주 동구), 김은숙(부산 중구), 조용수(울산 중구)구청장.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구도심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광주 동구청서 ‘대도시 구청장협의회’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을 비롯한 전국 7개 도시 구청장들은 15일 동구청 상황실에서 ‘제21차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를 갖고 ‘구도심 활성화 특별법 제정, 도심정비 지원, 재정지원’ 등 당면한 도심공동화 극복 대안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고 특별 대책을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광주 동구의 ▲떡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아시아 음식 문화 전문가 육성사업 ▲국가지정문화축제로 선정된 충장축제 등 전국 7개 중심구의 우수정책에 대한 소개와 정책교류를 지속적으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는 1996년 6월 7일 중심구 문제점에 대해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창립된 이래 도심 재개발 활성화 방안과 대도시 중심구 규제 완화 특별법 제정 등 모두 100여 건의 공동 현안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유태명 동구청장은 “이번 회동은 도심공동화 현상과 도시기반 시설 낙후 등 대도시 중심구가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제반문제를 공동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시설

광주·전남 관광 인프라 구축 적극 나서야

전남이 가족단위 여행 만족도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10~11월에 가족여행을 한 7개 광역시 거주자 30~50대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남이 5점 만점에 4.27점을 얻어 최고를 기록했다. 전남이 국내 대표적인 관광지로 꼽히는 제주(4위)와 강원(5위) 등을 제치고 전국 최고의 가족 여행지로 선정된 것은 의외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는 광주·전남 관광산업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설문결과를 보다 세밀히 들여다 보면 지역 관광산업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가족여행 만족도에서 식당·음식분야가 1위를 차지했고 소풍과 볼거리 부문에서 각각 2, 3위를 차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숙박

시설은 7위, 관광 정보·안내시설은 6위, 교통시설은 4위에 그치는 등 관광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는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광주·전남이 ‘머물고 즐기는 관광지’가 아닌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관광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관광은 관광자원의 서비스 산업이다. 따라서 관광자원이 아무리 풍부해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거나 다름없다. 광주·전남은 여수세계엑스포와 F1 대회, U대회 등을 잇달아 유치해 지역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이런 다시없는 호기(好機)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자체는 물론 지역민 모두가 관광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등록금 상환·상한제 이대론 안된다

학부모, 학생들의 숙원이었던 대학 학자금 상환제가 올 1학기부터 시행되고 1989년 폐지됐던 등록금 상한제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 대학 진학률이 92%, 등록금이 1천만원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상환제의 시행은 서민의 학자금 마련에 숨통을 틔워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이자부담이 크고 등록금 인상·상환제를 두는 데 대한 비판의 여론도 만만치 않다. 먼저 학자금 상환제는 5.8%의 이자에 복리가 적용되고 재학 중에도 이자는 불어나도록 돼 있다. 정부가 내놓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재학기간 4년 동안 3천200만원을 빌린 학생이 졸업 연봉 1천900만원인 직장에 취업했다면 상환하는데 25년이 걸리고 원금과 이자를 합하면 9천705만원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평생 빚을 지고 살 수도 있다는 얘기다.

등록금 상환제는 등록금인상 상한선을 지킨 연도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경기 한파로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이 많은 상황에서 오히려 인상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대학들도 자율성 침해와 경쟁력 하락 등을 이유로 불만인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학 등록금 문제가 여객의 여론의 일은 아니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등록금 인하를 빼대로 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가시화 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시절에 “등록금 반값”을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던가. 사립 대학들도 전체 등록금 수입의 20%를 적립금으로 쌓아 놓고 있으면서도 재단 전입금을 5%만 내고 있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상환제와 상한제 모두 ‘재설계’해야 하는 이유다.

“정상화 위해서라면 구 재단측 만날 것”

강현욱 신임 조선대 이사장



인연이 없는 백지상태라는 점”이라면 “이 시간 이후 구 재단 등의 개념은 무의미하며 조선대의 화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겠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미 선임인 이사 2명과 관련해서 “사실 오늘 이사장 선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교과부 등과 이 부분(이사 선임)에 대해 얘기할 틈도 없었다”면서 “법적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이사회에서 나머지 2명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교과부와 협의의 여지를 거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구 재단측의 이사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갑자기 이사장에 선출돼 어떤 말(입장)을 할 상황이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강 이사장은 또 조선대를 전국 최고의 명문 사학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강 이사장은 광주·전남과의 인연에 대해서 “아내의 고향이 목포여서 광주와 전남을 자주 방문했다”면서 “이러한 인연으로 지역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과도 친분이 깊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지난 65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농림수산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국회의원, 전북도지사 등을 지냈으며, 현재 새만금위원회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72 정 치 부 2200-634 경 제 부 2200-641 사 회 1 부 2200-612 <F A X 222-4267>	사 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문 화 생 활 부 2200-661 여 령 매 체 부 2200-679 체 육 팀 2200-663 사 진 부 2200-691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00-960 <F A X 227-9500> D 자 인 2200-536 <F A X 02-773-933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빛日만평

- 김종두

올해도 허리띠고 살긴 이미~

여야 세종시 ‘忠心잡기’ 각축전 치열

세종시 수정 문제가 장기전 양상을 띠는 가운데 충청 민심을 선점하기 위한 여야간 맞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남 천안에서 지도부가 총출동, 세종시 수정의 당위성을 홍보한 데 이어 주말인 16일에는 정몽준 대표가 용봉산과 수덕사, 당진제철소를 잇따라 방문, 세종시 수정안 여론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정몽준 총리도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첫 주말인 16일 1박2일간 충청지역을 방문한다. 정 총리는 세종시가 들어설 연기군의 재래시장과 노인시설 등을 찾고 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전방위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은 15일 천안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 결사반대 및 이명박 정부 규탄대회’를 열어 세종시 원안 추진을 위한 여론전을 펼쳤다. 이 같은 여론전 속에 여야 지도부는 이날도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날선 공방전을 이어갔다.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확대당직자 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의 효력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엄포설한에 장외투쟁을 벌여 국민을 불안케 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정권이 행복도시 백지화를 위한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섰다”며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여론조작, 공작으로부터 표현될 수 있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원안 수정이 정권의 소신이라면 왜 땀땀하게 설득하고 토론하고 정면 대응하지 못하는가”라며 “여론몰이를 하는 모습은 신념을 가진 정권당주 못하다”고 가세했다. /연협뉴스